

# 원인 규명·책임자 처벌 주력...쉽지 않은 철거 방식 고심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한달...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경찰 일벌백계 방침 속 현대산업개발 법적 책임 밝히기 관심 집중  
주거지·터미널·백화점 인근 발파·장비 탑재식 철거 공법 어려워  
구조물 안전하지 않고 초고층 빌딩 철거사례 드물어 1년 걸릴 수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가 10일 로 붕괴된 지 한달이 됐다. 지난 8일 오후 6명 실종자에 대한 구조·수습이 모두 종료되면서, 이제 붕괴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붕괴 건물 처리 방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현대산업개발 책임 밝혀야= 붕괴사고의 가장 큰 쟁점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책임 규명이다.

공정을 서두르기 위한 '빨리빨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콘크리트 양생 불량, 지지대의 불법 철거, 구조계산 없이 실시된 공법 변경, 편법 재하도급 등 부실 시공의 정황들이 얽혀있지만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원청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찰도 이같은 점을 의식한 듯 수사에 의지를 보여 주는 모양새다.

경찰은 9일 붕괴건물의 현장감식에 나서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입장문'을 내놨다. 속도감 있는 수사로 사고 책임자를 한명도 빠짐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이 붕괴원인으로 지목한 부실 콘크리트 투입이나 불량 양생, 재하도급 등에 대한 수사가 전문가의 공학적 판단 결과와 나와야 하는 탓에, 먼저 동바리 해체와 수습에 이르는 콘크리트 담 형태의 지지대 설치 등의 공법 변경지시를 했거나 알고도 묵인 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측 관계자, 감리, 하청업체 관계자 등 총 60여명을 불러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붕괴원인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파악해 나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이달 하순부터 신병처리를 시작하겠다는 게 경찰의 구상이다.

김광남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번 사고의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 쉽지 않은 붕괴건물 철거 어떻게?=남아있는 화정아이파크 건물 철거도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조물이 안전하지 않은 데다, 세계적으로도 붕괴된 초고층 빌딩을 철거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붕괴사고가 난 201동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후 부분철거할 지, 혹은 해당 건물의 전면철거를 할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어떠한 철거가 진행되더라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전면 철거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법으로는 ▲발파공법 ▲장비 탑재식 공법 등으로 크게 나뉜다.

'발파공법'은 폭약으로 건물 전체를 주저앉히는 방식으로 전면 철거시 가능한 공법이지만, 201동은 현재 안정성이 떨어져 발파공법을 이용하면 지척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인근에 오피스텔 형 주거지가 많고 광주종합버스터미널(뉴스퀘어), 이마트 등이 있어 지역민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이다.

'장비 탑재식 공법'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학동잠사시 해체계획서에 있던 크리셔 공법이 대표적인 장비탑재식 공법이다. 고층 건물에 특수 굴착기인 '롱붐암' 등의 장비를 올려 상층부부터 철거를 진행해야 하지만, 해당 중장비는 수십에 달해 현재 건물상태로는 건널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부층에 지지대를



마지막 수습자에 경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9일째인 지난 8일 밤 26층 잔해 속에 있던 마지막 매몰자가 구조, 구급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붕괴현장에 있던 모든 소방대원들이 도열해 떠나는 차량을 향해 거주경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충분히 설치해 가장 안정적인 코어 부근에서 작업이 진행되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지만, 장비의 하중을 버티지 못해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와이어로 건물 일부를 잘라 내며 들어내는 공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이인 안홍섭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정밀 안전점검을 거쳐 적절한 철거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벽만 남은 남측의 외벽 철거는 슬라브가 있는 층과는 다른 철거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11일부터 반려견 외출 시 '목줄 2m 이내' 제한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해 이를 구체화했다. /연합뉴스

## 여순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 출범

2024년 1월 20일까지 활동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여순사건 실무위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실무위원회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유족대표 4명, 법조계 1명, 학계 1명, 전문가 및 시민단체 3명 등 위촉직 9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에는 박성태 여순사건 유족협의회 상임대표, 박희원 여순사건 유족회 공동대표, 이경재 여순사건 유족협의회 공동대표, 남중욱 순직 경찰 유족 대표, 한소영 변호사, 최성환 목포대 사학과 교수,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부소장, 최경필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무처장, 박병섭 순천대

여순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2024년 1월 20일까지 2년간 여순사건 실무위원으로 활동한다.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을 위한 조사, 의료 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 등을 담당한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으며,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전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추진하게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동료 직원 성추행 혐의

양향자 의원 전 보좌관 2심서 감형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양향자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 전 특별보좌관 A(53)씨에 대한 항소

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친척인 양 의원의 지역사회사무실에서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